

2022년 연간보고서



빈곤 복지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홈리스 차별 인권위 진정

동자동 쪽방촌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역이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홈리스추모제 주간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이 지역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 분석하여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혐오 게시물을 부착한 서울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권고를 받았습니다.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2022. 7. 11. 공감은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 빈곤, 노동, 복지, 환경의 교차점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령에도 생활고로 은퇴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과 복지 영역에서 연구, 활동과 사회사업을 해오신 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빈곤과 자원순환이 만나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손쉬운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럴수록 논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활동

공감 여성인권팀은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촬영과 단속 촬영물 언론제공,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 강요 등 성매매 단속현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현행 처벌법규로 인해 여성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적 단속을 감수해야 하고 이런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습니다. 공감은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성매매 여성들의 구체적 목소리가 사회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지원

공감은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권리확대를 바탕으로 한 사건 해결을 모색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과 예방교육 연구 사업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충북 농장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자의 법률상담, 추가 피해 고소, 경찰조사동행, 공판 참여를 마쳤습니다. 또 성매매 과정 중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접수를 누락한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고 재수사 기회를 얻어 사건 해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선입견이 사실의 진위판단에 앞서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사례를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신청 잇단 승소 소식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감은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사건에서 생식능력 제거 수술과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필수로 요구하는 법원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 지침을 개선하고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사건 중에서 수술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9건은 허가 결정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중이거나 항고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내 첫 인정 판결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커플의 경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피부양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동성부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법원은 생계를 함께 하는 동성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공감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민인권



국가는 어떻게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되었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새우튀김' 고문, 기억하시나요? 2022년 법무부는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 서명운동, 토론회, 국가배상소송 참가 등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공감은 2023년 초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고려인 A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상당 기간 거주한 A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 문제 되어 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회 자의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국적 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가 본국 정부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으며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



우리 결의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서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괴롭힘과 성희롱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공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구자들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합과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장애인활동 지원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할 정부의 의무를 확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감은 올해도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며 그 과정에서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을 채워주는 방송 노동자들의 곁에서

우리가 보는 뉴스, 드라마, 예능 등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는 방송 스태프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방송국은 하루아침에 10년을 일한 방송작가를 해고하고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스태프들이 만든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힐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KBS 드라마 미남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정을 이끌어 낸 공공운수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본부 방송스태프지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방송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인권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사무국 활동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서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PR)절차에 참여합니다. 2023. 1. 26.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심의가 있었고,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공감은 2022년 제4차 UPR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 보고서 공동 집필, 정부·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각국 대사관 및 대표부 면담 등에 참여해, 각 국가가 대한민국의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라오스댐 참사, 그 현장에 가다

공감은 2022. 9. 라오스의 세피아안-세남노이댐 붕괴사건 현장을 방문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피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018년 이 댐 붕괴사건으로 7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최소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유엔 기업과인권위킹그룹 진정,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진정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책임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의 지속 가능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정신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공감은 정신장애인의 욕구·특성을 전제로 한 치료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권익옹호 시스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자문위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 당사자 2명의 인신구제청구를 대리하여 당사자들의 인신구속이 해제되었으며, 입법추진위원회 활동으로 2023.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은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에 대응하여 인신구제청구소송의 선례를 만들고, 정신장애인이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활동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에 따라 비준된 조약에 해당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공감은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점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대응하여 정부 보고서·답변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2. 9.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최종견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현실에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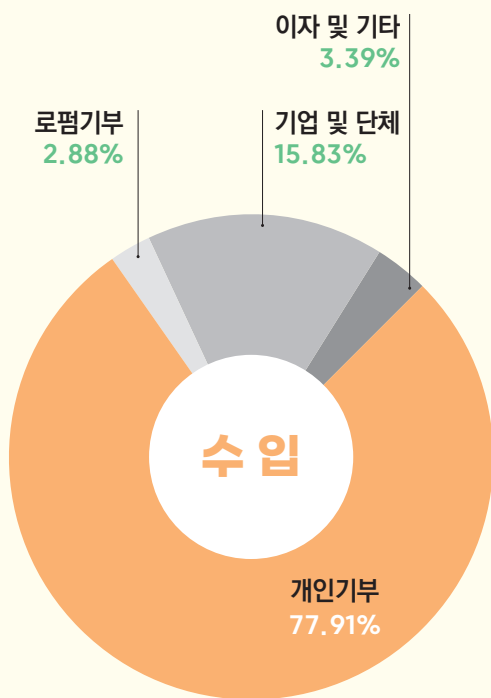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추모와 애도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합니다. 공감은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실태조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분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며, 기소 사건 공판 모니터링 및 피해자 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만큼 공감은 피해자들의 곁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4년간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활동을 마무리 하다

공감은 2018. 3.부터 2022. 9.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국가권력의 사찰 등 부당한 개입 조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80건의 권고가 도출되었는데 공감은 이들 권고의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자 합니다.

GOONG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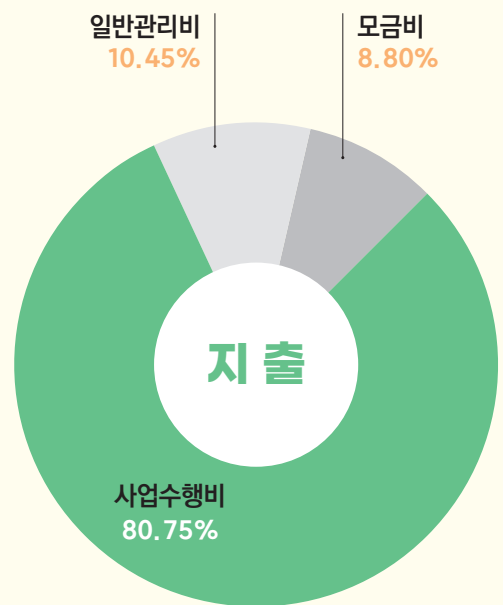
2022년
10대 인권실태조사
2022년
전년도



(단위:천원)

개인기부	717,710
로펌기부	26,500
기업 및 단체	145,846
이자 및 기타	31,198
합계	921,254

2022년 공감살림살이



(단위:천원)

사업수행비	733,301
일반관리비	94,945
모금비	79,883
합계	908,129